

# 조선시대 嶺南儒生の 公論形成과 柳道洙의 萬人疏

설 석 규\*

## ■ 차례 ■

1. 머리말
2. 嶺南儒生の 公論形成
3. 柳道洙의 公論觀과 萬人疏 疏頭薦望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1875년(고종 12) 閩山 柳道洙를 疏頭로 한 大院君 奉還 請願 영남만인소의 전달과 의미를 영남유생의 공론형성 경향과 연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조선시대 정치는 도덕과 명분을 중시한 사림이 주도한 士林政治이면서도, 정치세력의 공존과 견제를 지향한 朋黨政治이자, 재야유생들의 상소를 통한 정치참여를 보장한 公論政治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재야사림들의 공론형성이 활성화되었고, 그들의 공론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한 재야사림의 공론형성을 통한 정치참여를 주도한 것은 영남사림이었다. 그들은 사림정치의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仁祖反正 이후에는 집권 서인세력과 文廟從祀 논쟁을 비롯한 服喪 논쟁을 전개하며 견제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그들의 공론형성은 英祖代 謹悉의 실시로 규제를 받기도 했으나, 萬人疏의 방법으로 장벽을 돌파했다. 아울러 그들은 勢道政權의 공론봉쇄를 돌파하는 도구로 그것을 활용했다. 柳道洙의 영남만인소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유도수는 대원군이 집권한 것을 계기로 세도정치로 인해 위축된 사림정치를 활성화

\* 경북대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는 대원군의 개혁이 성리학적 질서를 근간으로 각종 병폐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右議政인 柳厚祚에게 鄉約의 시행을 촉구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相鑑博議』를 저술해 왕의 보좌에 참고하도록 전하기도 했다.

대원군의 直谷 은거는 영남사람이 기대한 개혁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원군의 봉환을 위한 영남사람의 공론은 쉽게 형성될 수 없는 사정에 있었다. 대원군이 屏派와 虎派의 保畧을 추진하면서도 서원을 휘철하는 과정에서 屏山書院을 남겨둔 채 虎溪書院만 대상에 포함시켜 호파의 반감을 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영남사람의 공론을 집약해 萬人疏 捧入을 주도할 보합적 인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柳道洙가 疏頭로 천망된 사실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는 그가 병파에 속하면서도 호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향촌사회에서 그의 위상의 일단을 말해준다.

그러나 대원군 봉환청원 영남만인소는 그를 비롯한 疏任들이 유배됨으로써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와 함께 그가 대원군에 의지해 구현하기를 기대했던 사림정치 역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 주제어

사림정치, 봉당정치, 공론정치, 만인소, 소두, 근실체제, 병호시비

## 1.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언론은 司諫院·司憲府·弘文館 등 言官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조선왕조 정치운영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치참여 계층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언론은 언관들에 국한되어 행사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宣祖代 이후 士林을 중심으로 한 정국운영 체제가 확립되어 儒生들이 정치의 客體에서 主體의 범주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언관들의 在朝言論과는 별도로 館學(成均館·四學)儒生과 鄉村儒生이 주축이 된 在野言

論이 형성되고 있었다.<sup>1)</sup>

유생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재야언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된 배경은 公論을 중시하는 정치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유생의 공론형성을 통한 정치 참여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관념적인 修辭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사림세력이 소수의 勳戚勢力의 독점적 정치운영 형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생공론은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치참여 계층의 확대를 통한 훈척세력의 견제를 지향하는 사림세력의 정국운영 방향의 산물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유생들이 실질적인 공론형성층으로 성장하면서 ‘一國公共之論(公論)’은 사실상 ‘士林公共之論(士論)’으로 압축되었고, 三司와 함께 成均館이 ‘公論所在’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유생공론은 정국에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sup>2)</sup>

유생들이 公論을 표방할 수 있는 방식은 上疏뿐이었지만, 儒生上疏는 사림일반의 공론을 반영하는 포괄성과 함께 다수의 유생이 참여하는 집단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在朝公論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儒疏는 관료정치라는 제도적 장치보다 朋黨政治라는 정치세력의 역학관계를 지향하는 정치형태의 대두에 따라 언관의 언론보다 오히려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다. 곧 광범한 공론을 토대로 집권명분을 획득하려는 중앙의 정치세력에게 유생공론의 존재는 재조공론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정치세력과 유생들의 정치적 연대가 촉진되어 그들이 봉당의 사회적 기반으로 기능하게 되는 단서가 마련되었다. 조선시대 정치가 도덕과 명분에 투철한 사림이 주도하는 士林政治이면서도,<sup>3)</sup> 정치세력의 상호 공존과 견제를 지향하는 朋黨政治이자,<sup>4)</sup> 정치적 명분확보를 위해 공론대결을 근간으로 전개된 公

1) 金墩,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연구』, 서울대출판부, 1997.

2) 崔異敦, 『조선중기 사림정치 구조연구』, 일조각, 1994.

3) 鄭萬祚, 『朝鮮時代の 士林政治』, 『韓國史上的 政治形態』, 일조각, 1993.

4) 李泰鎮, 『黨爭을 어떻게 볼 것인가』,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범조사, 1985.

論政治로<sup>5)</sup> 규정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정국주도권은 사림세력 대신 外戚勢力이 장악하게 되었고, 사림의 역학관계를 지향하는 朋黨政治는 외척의 배타적 권력독점을 기반으로 하는 勢道政治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사림의 공론 역시 세도정권에 의해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수반하여 유생의 上疏도 제한 대상이 됨으로써 그들의 정치참여도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생들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공론형성을 통한 정치참여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했다.

특히 영남유생들은 萬人疏를 표방하는 방법으로 조정의 규제를 피하면서 대규모의 공론형성을 통해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1855년(철종 6) 李彙炳을 疏頭로 10,432명의 영남유생이 참여한 思悼世子 追尊 請願疏, 1871년(고종 8) 鄭民秉을 소두로 10,027명의 영남유생이 참여한 書院毀撤 反對上疏, 1875년(고종 12) 柳道洙를 소두로 한 大院君 奉還 請願 영남만인소, 1881년(고종 18) 李晚孫을 소두로 13,000여 명의 영남유생이 참여한 衛正斥邪 상소 등이 그 같은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sup>6)</sup>

본고는 閩山 柳道洙(1820~1889)가 중심이 되어 捧入한 嶺南萬人疏의 전말과 의미를 영남유생의 공론형성 경향과 연관하여 규명해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먼저 조선시대 공론정치의 구조에서 영남유생의 상소를 통한 정치참여 양상과 성격을 검토한 다음, 유도수의 公論認識과 더불어 그가 대원군 봉환 만인소의 疏頭로 薦望되는 사정과 전말을 살펴보고자 한다.<sup>7)</sup>

5)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2002.

6) 영남유생의 만인소는 정조 16년(1792) 李堉를 疏頭로 하여 10,057명이 참여한 思悼世子 伸冤上疏가 처음이다. 이 萬人疏의 捧入顛末과 의미에 대하여는 李樹健, 「正祖朝의 嶺南萬人疏」 『嶺南史學』1, 영남대 국사학과, 1985. 참조.

7) 柳道洙를 소두로 한 대원군 봉환 만인소의 배경과 경과에 대하여는 19세기 후반 영남 사림의 동향 및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여 검토한 논고(정진영, 「19세기 후반 嶺南儒林의 정치적 동향—萬人疏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 부경역사연구소, 1997)가

## 2. 嶺南儒生の 公論形成

儒生은 유학을 공부하는 재야의 지식인을 통칭하는 것으로, 司馬試에 합격한 生員·進士를 비롯해 幼學으로 지칭되는 부류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유생은 신분적으로 지배계층에 속하여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었지만, 관료로 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중인·상민·천인과 마찬가지로 통치의 대상에 해당하였다. 조선 초기 관료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통치체제 확립을 위해 『經國大典』을 편찬할 당시 유생의 정치참여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도 그들의 존재가 통치의 客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정치가 公論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공론형성층으로서 유생의 정치적 역할이 점차 부각됨과 동시에 정치참여를 위한 길도 마련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 公論은 李珣가 “人心이 동의하는 바를 公論이라 하고, 공론이 있는 바를 國是”<sup>8)</sup>라고 정리한 바와 같이 국가의 元氣이자 國體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간주되었으며, 公論所在은 天心의 소재로 규정되었다. 군주도 人心을 천심과 동일시하여 정치를 운영하는 것으로 정통성을 부여받는 한 공론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었다. 또한 공론은 모든 인심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는 朝官뿐만 아니라 庶民의 논의도 사실상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민의 논의를 수용한다는 것은 명분일 뿐이고 단지 “儒者는 모두 公論이 있다”<sup>9)</sup>고 하여 양반유생의 논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압축되었다. 그것은

---

있다. 여기에는 19세기 영남지방 사림의 동향과 관련하여 대원군 봉환 만인소의 배경과 전말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구되어 있다. 그러나 유도수의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의 범주에서 公論觀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소두로 추천되는 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등의 검토를 통한 대원군 봉환 영남만인소의 공론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8) 『栗谷全書』 권7, 疏筭5 代白參贊疏.

9) 『世祖實錄』 권39, 12년 4월 戊辰.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유생들도 대간의 在朝公論과는 별도로 在野公論을 형성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생이 공론형성층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성종 23년(1492) 國家事의 경우 上疏를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sup>10)</sup> 儒疏의 공론성이 확보되면서부터였다. 연산군의 군주 전권체제 확립에 따라 일시 차단되었던 유생의 공론형성은 中宗反正을 계기로 ‘君臣共治’의 논리가 강조되고 己卯士林이 등장하게 되면서 館學生을 중심으로 촉진되고 있었다. 그들은 聖學을 공부하는 유생은 ‘國家의 興亡’과 ‘吾道(儒學)의 盛衰’와 관련된 것에는 반드시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sup>11)</sup>는 논리로 정치참여 명분을 구축해 가고 있었다. 여기에는 留鄉所와 鄉廳을 배경으로 재지적 기반을 강화하던 향촌유생도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유생들의 성장에 의해 仁宗이 관학을 ‘公論所在’로 인정하여<sup>12)</sup> 유생의 정치적 是非의 참여를 보장하게 됨으로써 유생공론은 在朝公論과 대등한 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明宗代 文定大妃를 정점으로 한 勳戚政權이 다시 언관을 비롯한 유생공론을 통제하게 되었으나, 유생들은 궁중의 崇佛행위를 호기로 활용하며 꾸준하게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적 연대를 확대해 나갔다. 그리하여 명종 20년(1565) 언관들이 尹元衡을 탄핵하는 동안 유생들은 그들의 결집된 공론으로 훈척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普雨를 집중 탄핵함으로써 재조공론과 역할분담을 통해 훈척정권의 와해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같이 훈척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사림공론의 위력은 뚜렷한 외척이 없는 선조에게 새로운 정국운영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士林勢力의 공론이 王權을 보장하는 대신 군주는 사림의 공론을 토대로 정국을 운영

10) 『大典續錄』 권5, 刑典 訴冤.

11) 『仁祖實錄』 권25, 9년 10월 丁巳 “先正臣李滉言空館事以爲 士子本無言責 不可盡言是非 惟宗社之安危 吾道之盛衰 則雖陳疏可也”

12) 『仁宗實錄』 권1, 원년 3월 己卯.

하는 상호 보합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그러한 배경이 작용한 결과였다. 곧 군주는 척신과 같은 특정 권력집단에 의존하지 않고 유생을 포함하는 사림의 공론을 근간으로 정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公論政治의 기초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한 훈척정권의 와해와 사림정권의 등장에 따른 공론정치는 영남의 유생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이 주도한 普雨의 誅殺을 촉구한 상소운동은 윤원형의 탄핵과 더불어 훈척정권 붕괴의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안동 유생 權審行과 상주유생 金宇宏 등 영남의 유생들이 추축을 이루었다.<sup>13)</sup> 권심행 등이 成均館의 空館을 주도하는 한편 2백여 명이 참여한 '請斬普雨疏'를 올린 데<sup>14)</sup> 이어, 김우평이 소두가 되어 전후 22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렸다. 당시 상소에는 영남의 42개 군현의 유생들이 참여했는데,<sup>15)</sup> 그것이 결과적으로 훈척정권이 사림의 공론공세로 무너지는 촉매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생공론의 위상강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선조대 南冥學派와 退溪學派가 주축이 된 영남사림들이 개혁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배경도 결집된 유생공론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기다 선조 25년(1592)에 일어난 壬辰倭亂 당시 남명학과를 중심으로 한 영남유생들의 활발한 의병활동은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광해군대 金宏弼을 비롯해 鄭汝昌·趙光祖·李彦迪·李滉이 문묘에 배향될 당시 조광조를 제외한 4賢이 영남사람이라는 사실은 영남유생 공론의 명분상 우위를 보장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물론

13)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14) 『明宗實錄』 권31, 20년 8월 壬戌.

15) 당시 여기에 참여한 영남유생들의 거주지를 보면 尙州·加恩·榮川·咸昌·龍宮·體泉·淸道·知禮·大丘·星州·開寧·善山·三嘉·固城·慶山·高靈·靈山·玄風·陝川·金山·豊基·居昌·咸安·柒原·安陰·宜寧·金海·昌原·慶州·山陰·聞慶·蔚山·彦陽·昌寧·丹城·軍威·咸陽·青松·東萊·梁山·晉州·草溪 등 42개 군현인 것으로 나타난다(『開庵集』 권3, 雜著 西行日記).

그 과정에서 曹植이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은 鄭仁弘 등 일련의 남명학파가 晦退辨斥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영남유생의 공론이 분열하기는 했지만, 그 위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仁祖反正 이후 퇴계학파로 수렴된 영남의 남인유생들이 西人政權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정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명분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조반정의 성공은 士林政治를 표방하면서도 公論을 조작하며 배타적이고 기만적인 권력독점을 지향한 大北政權에 대한 사림의 반감을 수렴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명분상 취약성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반정을 주도한 서인세력이 대북정권의 패륜적 행위로 내세운 廢母는 사실상 '幽廢母后'를 왜곡한 것으로 실제 단행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광해군에 의해 추진된 明과 後金에 대한 등거리 외교도 명분과 실리를 감안한 현실적 방책으로서 尊周大義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던 데다 대북정권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서인세력은 반정 직후 '無失國婚'을 맹약하여 外戚과의 연대를 통한 정권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sup>16)</sup> 이는 외척을 배제하고 사림의 公論을 토대로 정국을 운영하는 사림정치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동적 발상의 산물이었다.

서인세력이 李珣와 成渾의 학통을 자부하며 文廟從祀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도 그들 정권이 사림정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표방함과 동시에 명분상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에 따른 것이었다.<sup>17)</sup> 그들이 광해군대 정치에 책임이 있는 大北系 인물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대신 南人 및 小北系 인물들을 발탁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집권과정에서 군주까지 축출한 그들의 명분상 취약성을

16) 禹仁秀,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일조각, 1999.

17)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の 文廟從祀 運動과 그 性格」, 『朝鮮史研究』 3, 조선사연구회, 1994.



보강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서인세력의 명분적 취약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우위라는 이율배반적 현실은, 道學의 적통으로 자부하며 명분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영남의 退溪學派에게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대북세력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정국운영이 초래한 정치적 한계를 절감해 反正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명분상 취약성을 안고 있는 데다 정치적 모순까지 유발하는 서인정권에 동조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成渾·李珥의 문묘종사를 추진한 서인세력에 제동을 걸고 나설 뿐만 아니라 宋時烈의 禮論을 비판하며 服喪논쟁을 전개하게 되는 것도, 서인정권의 근원적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 주도의 질서수립을 통한 명분상의 우위를 견지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sup>18)</sup>

成渾과 李珥를 문묘에 종사하려는 서인세력의 운동은 인조반정 직후 집권 명분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시도는 왕의 반대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특히 인조는 宋時瑩 등 유생들이 李滉 이후 유림의 宗師로서 道統을 계승한 사람은 성혼과 이이뿐이라며 그들의 문묘종사를 촉구한데 대해, “道德이 높지 못하고 결함에 대한 세상의 비방이 있다”<sup>19)</sup>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비답을 내리기도 했다. 이같이 인조가 의도적으로 이이와 성혼을 폄하하는 비답으로 서인을 자극한 것은 그들 정권의 독점적 정국운영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군주의 입장을 천명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문묘종사는 인조대에 더 이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孝宗이 즉위하면서 재연되었다. 효종 즉위년(1649) 11월 太學生 洪蕝 등 수백

18) 薛錫圭, 「현종 7년 嶺南儒林의 議禮疏捧入 顛末」, 『史學研究』 50, 한국사학회, 1995.

19) 『仁祖實錄』 권31, 13년 5월 庚申.

명의 유생들이 그들의 종사를 청원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효종은 종사는 중대한 문제로 가볍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들의 수차례 계속된 청원을 거절하였다.<sup>20)</sup> 그러자 이듬해인 효종 원년(1650) 2월 進士 柳樓 등 9백여 명의 유생들이 두 사람의 出處와 道德을 문제 삼아 문묘종사 반대가 영남유생의 공론임을 표방하며 서인세력의 종사운동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여기서 그들은

李珣의 학문은 오로지 氣만을 주장하여 기를 理로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리와 기를 같은 것으로 여겨 다시 분별함이 없었으며, 심지어 마음이 바로 기이고 四端과 七情이 모두 기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병통의 근본은 원래 道와 器를 변별하지 않은 陸九淵의 견해에서 나온 것으로, 그 폐해는 作用을 性의 體라고 한 釋氏의 주장과 같습니다. 대체로 리와 기의 분별은 바로 학문의 生死가 걸린 갈림길이며, 天理와 人欲의 정밀한 한계뿐만 아니라 儒道와 異端의 다른 점과 옳고 그름이 모두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혼의 학문은 이리와 같은 맥락으로, 이른바 “리와 기는 같이 발한다”는 등의 말은 필경 큰 근본에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窮理나 格物에 관한 일을 강구하여 밝힌 것은 없고, 다만 정신을 보존하고 아껴야 한다는 말로 제일의 法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바로 道家의 自私自利의 설로서 儒家의 학문하는 규모가 아닙니다.<sup>21)</sup>

며 이이와 성혼의 성리학적 세계관이 지닌 허구성을 지적하며 문묘에 배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서인정권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정통성을 부정한 것으로, 그것을 계기로 서인과 남인세력은 두 사람의 문묘종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론대결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문묘종사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효종이 사망한 것을 신호탄으로 서인과 남인은 다시 服喪論爭에 돌입하게 되었다. 第一次 禮訟으로 알려진 己亥服制 論爭은 현종 즉위년(1659) 효종에 대한 趙大妃의 服이 宋時烈的 예

20) 『孝宗實錄』 권2, 즉위년 11월 戊寅.

21) 『孝宗實錄』 권3, 원년 2월 乙巳.

론에 따라 養年服으로 결정된 이래 三年服을 주장하는 남인계 儒臣 및 儒生들의 잇따른 이의제기로 현종 7년(1666)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서·남인 儒臣들의 논쟁의 핵심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집약해 볼 수 있다. 첫째, 三年服을 입을 수 없는 四種之說 가운데 庶子が 계승하는 경우인 ‘體而不正’을 적용하게 될 때 庶子は 衆子로 해석할(西人) 것인가, 妾子로 간주할(南人) 것인가. 둘째, 왕실의 服喪문제를 士大夫禮의 일반론에 적용한 ‘天下同禮’에 입각하여 해석할(西人) 것인가, 王朝禮의 특수성을 인정한 ‘王者禮不同士庶’를 감안할(南人) 것인가. 셋째, 長·次子 구별 없이 養年服을 입도록 한 『大明律』과 『經國大典』의 규정에 비준을 둘(西人) 것인가, 第一子가 사망할 경우 嫡妻所生 중 第二子를 세워 長子로 규정토록 한 『儀禮注疏』의 해설을 따를(南人) 것인가<sup>22)</sup> 등이었다.

그러나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세력이 기년복을 주장한 것은 次子が 嫡統을 잇는(聖庶奪嫡) 왕통상의 변칙을 인정하여 효종의 宗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성리학의 근본이념에 토대를 둔 宗法의 보편성을 고수해야 하는 현실적 괴리를 극복한 결과이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재위기간 내내 서인세력의 독주를 보장하지 않은 효종에 대한 정치적 반감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현종의 예송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가져와 尹鑄·許穆·尹善道로 이어지는 논리적 공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며, 논쟁에 쐐기를 박는 영남유생의 議禮疏 捧入을 자초하게 되었다.

현종 7년 柳世哲을 중심으로 한 영남 70부의 유생 1,100명은 疏文에서 송시열의 예론이 名分을 문란하게 하고 宗嫡을 무너뜨려 倫紀를 뒤바꾼 것이자 先王을 모욕한 행위라 규정하면서, 신하가 임금을 받드는 것은 천하의 綱常이라 주장하며 議禮의 방향이 왕통의 수호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런 다

22) 李成茂, 「17세기의 禮論과 黨論」, 『조선시대 黨爭의 綜合的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음 그들은

옛날 武王 말기 왕명을 받은 周公이 文·武의 덕을 완성하면서 王·太王·王季를 받들어 천자의 예로 제사지내게 한 것은 무왕의 마음을 따라 三王을 존승코자 함이며, 三王의 마음을 따라 無窮에 이르러 周家の 宗廟으로서의 법통을 천하·후세에 더욱 밝히고 존중토록 하고자 했던 것이니, 이것이 주공의 孝였습나다. 설사 그 때 주공의 制作의 번성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禮說을 논하는 신하가 季歷을 太王의 季子라 하고 武王을 文王의 次子라 하여 名號를 폄하하고자 庶子의 禮로 대우하면서 文王·武王을 下正의 庶라 하여 宗廟의 법통에 들지 못하도록 했다면 宗廟를 종묘가 될 수 없게 하고 王室을 왕실이 될 수 없게 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이는 주나라 선왕들이 그 자손들의 존승을 받을 수 없게 하고, 그 子孫·臣庶가 선왕들을 받들 수 없도록 하는 셈으로 인륜의 크나큰 변고라 하겠으니 과연 典禮를 밝힌 것이라 하겠습니까. 또 당시 설사 이런 일이 있었고 조정의 신하들이 바로 잡을 수 없었다면 공론이 격발하여 초야의 신하들과 國學·州序·黨庠·家塾의 선비들이 감히 지나간 때의 일이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쏟는 한이 있어도 成王에게 고해 잘못을 공격했지 좌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sup>23)</sup>

며 孝宗이 嫡統에서 나온 次長으로 대통을 계승한 仁祖의 武王이라 규정했다. 나아가 그들은 송시열이 “효종이 인조의 庶子が 되는 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효종이 장자이자 적통이라는 사실을 부정해 종묘의 주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현종도 적통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획책하는 것이라 비난하기도 했다.

당시 문묘중사 논쟁과 복상논쟁의 과정에서 서인세력에 대응하는 영남 남인유생들의 입장에는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사실 문묘중사 논쟁은 서인세력의 宗匠인 成渾과 李珣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서인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23) 『顯宗實錄』 권12, 7년 3월 庚子.

없는 것으로, 궁극에 정권교체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상논쟁은 서인의 주론자인 宋時烈의 禮論을 비판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상 왕실의 상복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그것이 비록 왕권의 강화 또는 제약이라는 정치적 요소가 일정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서인정권의 정통성과 연관된 문묘종사 논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종사논쟁과 복상논쟁을 주도하는 세력이 갖는 대응자세에 차별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곧 효종 원년 문묘종사 반대운동은 柳樓이 소두이기는 했지만 疏文은 李榘가 製疏했으며, 현종 7년 의례소의 소두는 柳世哲이지만 소문은 그의 재종숙인 柳元之가 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구와 유원지는 공통적으로 퇴계학파의 학풍을 계승하고 있었지만,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정치철학의 형성에 차별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구는 서인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換局을 지향하는 한 입장인 반면, 유원지는 서인의 정치적 우위와 남인의 명분상 우위의 교차유지를 통한 공존을 염두에 둔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4)</sup> 이는 서인정권에 대응하는 남인 정치세력 내부에 강·온의 입장이 병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이 정국의 변화에 탄력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숙종대 정치세력의 교체가 반복되는 換局은 이미 여기서 예고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국에서 소외된 뒤 屏虎是非로 상징되는 향촌사림 내부의 鄉戰 또한 그 과정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셈이다.<sup>25)</sup>

24) 薛錫圭, 「拙齋 柳元之의 理氣心性論 辨說과 政治的 立場」, 『朝鮮史研究』 6, 조선사연구회, 1997 및 「活齋 李榘의 理氣心性論 辨說과 政治的 立場」, 『朝鮮時代史 學報』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참조.

25) 퇴계학파 내부 屏論·虎論의 형성과 분화를 통한 屏虎是非의 정치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설석규, 「퇴계학파의 分化와 屏虎是非( I )」,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참조.

한편 中宗代에서 正祖代에 이르는 기간 동안 實錄에 기록된 儒疏의 수는 모두 2,208건(連疏는 제외)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영남유생의 상소는 모두 228건으로 10%에 불과하며, 全羅·忠淸·京畿지역 향촌유생들의 그것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6세기 전국에 1만 명 정도로 추산되던 유생의 수가<sup>26)</sup> 효종대에 이미 영남에만 만 명이 넘어서는<sup>27)</sup> 데다, 그들의 정치·사회적 결속을 보여주는 書院과 祠宇가 영남 지방에서 가장 활발하게 건립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선시대 건립된 전체 909개소의 서원·사우 가운데 36%에 이르는 324개소가 영남지방에 소재하고 있었다<sup>28)</sup>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숙종대 大司成 金萬重은 이미

書院을 설립하려는 의도는 不美한 것이 아니지만 그 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一邑에만도 7~8개에 이르고 一道에는 80~90개에 이르고 있는데 서원의 번성함이 嶺南만한 곳이 없습니다. 토지를 廣占하고 閑丁이 많이 모여서 權力은 항상 守令權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농담이나 천박하고 경솔한 논 의만을 일삼고 아래 것들은 모여서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일을 삼으니 士習의 불미스러움이 진실로 우려됩니다.公私 모두 財力이 궁핍해 곤궁할 때를 당했으니 약간의 定制가 필요합니다. 臣이 보기에는 書院이 지극히 많고 聖朝의 崇報之典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설혹 儒賢이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후세의 公議를 다소 기다리되 지금은 一例로 정지하여 請建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이미 설립된 서원으로 賜額되지 않은 것 중에 道德으로 높일 만한 자의 경우는 請額을 허가하되 疊設만은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sup>29)</sup>

라 하여 書院의 濫設로 빚어지는 사회·경제적 폐해의 실상 뿐만 아니라 특

26) 『中宗實錄』 권77, 29년 8월 癸丑 “傳于政院曰 四方儒生 意謂可至萬餘人 今觀錄名數 乃六千二百九十九也”

27) 『孝宗實錄』 권4, 원년 7월 辛亥 “嶺南士子 幾至萬數”

28) 鄭萬祚, 「韓國 書院의 歷史」, 『韓國學論叢』 29, 국민대 국사학과, 2007.

29) 『肅宗實錄』 권11, 7년 6월 癸未.

히 영남을 지목하여 향촌세력이 守畝權을 침해하는 상황까지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 같은 양상은 결국 영남유생들의 공론형성이 상소의 빈도에 의존하지 않는 대신 다수의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多衆疏를 활용하는 발판이 되었다.<sup>30)</sup> 조선시대 향촌유생들의 공론형성 과정은 黨色이나 地域에 따라 극심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세력과 연계되었거나 사주를 받는 것은 극히 간단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西人이나 老論세력의 유소가 朝官들이 製疏하는 경우가 많고 掌議조차 선발되지 않을 정도로 疏任의 임명도 간결한 편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또한 그들의 拜疏 과정도 官路를 통하거나 아예 대궐문 앞에 疏廳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형식적인 측면이 다분했다. 따라서 그들이 주로 표방한 八道聯合疏도 대규모의 유생이 연명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심지어 疏錄에 한두 명의 名帖만 첨부하고 聯合疏를 표방한 것이 발각되기도 했다.

그에 반해 중앙의 정치세력과의 연대가 미약하기는 했으나 향촌에서 독자적인 공론적 기반을 구축하며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었던 영남유생의 상소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경비·시간이 소모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公事員 등 疏行을 위해 지원하는 소임이 다수 임명되었고, 발의에서 捧疏까지 2~3개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陪疏儒生이 참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특히 영남 남인의 유소는 서인 및 노론세력의 견제와 분열획책으로 상소빈도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면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유생이 연명하는 多衆疏라는 점에서 정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공론정치 구조의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30) 이하 내용은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の 公論形成과 上疏經緯』, 『朝鮮史研究』 4, 조선사연구회, 1995 참조.

다중의 유생이 참여하는 영남유소의 그러한 경향은 영조가 士擧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행한 謹悉체제로 인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영조 49년(1773) 3월 八旬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왕은 유생공론의 왜곡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을 개탄하면서,

지금 팔순의 황혼을 맞고 보니 오래 동안 뜻을 두고 다스려야 했던 것은 역시 士擧를 바로잡는 일이었다. 이후로 비록 한명의 유생이라도 所懷陳章이 있으면 捧入할만한 것은 하되 一儒 혹은 書院建立을 청원한 것이나, 그 선조와 관련되지 않은 것 또는 남의 일에 간섭한 것들은 모두 봉입하지 말라. 그 疏章은 모두 성균관에 두고 기한을 정해 停擧토록 하라. 道儒陳章을 칭하는 것은 먼저 太學을 경유하여 문도록 하라. 만약 바로 捧모할 경우 일의 경중을 막론하고 봉입하지 말라. 그 소장은 태학에 보관하고 書錄人은 모두 10년 停擧하도록 전하라. 하나는 賢關(太學)을 중시한다는 뜻을 보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猥雜을 징계하기 위함이다.<sup>31)</sup>

라고 하여 道儒疏는 반드시 성균관을 먼저 경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근실체제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향유소는 成均館 掌議의 '謹悉'을<sup>32)</sup> 받아야만 승정원에 상소를 봉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근실체제가 비록 유생공론을 성균관에 집약하여 통제의 효율을 기하고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균관이 黨色을 배제하고 명실상부한 공론소재로서의 기능을 행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영조의 조치는 공론소재로서 성균관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외람되고 난잡한 상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 따

31) 『承政院日記』 책1336, 영조 49년 3월 12일.

32) '謹悉'은 원래 臺諫이 啓達할 일에 대해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하여 簡通을 돌릴 때 동의를 표시로 사용되던 것이었다(『承政院日記』 책106, 효종 즉위년 6월 16일 "執義金弘郁啓曰… 臣既聞長官之言 知其出仕未易 又不言某日當出 既發之不可中止 以今日一會之意 發簡于多官 則皆書謹悉").



른 것이었으나,<sup>33)</sup> 당시 일방적으로 쇄도하던 노론유생의 상소를 통제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였다. 곧 영조는 노론과 소론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정치적 열세뿐만 아니라 명분적 취약성을 안고 있던 소론세력을 위해 직권으로 朴世采를 문묘에 종사한 다음 노론유생들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조치를 지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노론유생들이 성균관을 장악한 현실에서 이 조치는 영조가 의도한 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영남유생 상소 등 반노론계 유소의 통제장치로 악용될 여지가 더 많았다. 비록 영조가 향촌유생 상소의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는 반드시 京人과 鄉人을 각기 임명토록 하는<sup>34)</sup> 보완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상소의 봉입이 어렵게 된 영남유생들은 성균관에서 通文만을 보여주며 상소의 내용을 숨기거나<sup>35)</sup> 근실이 필요 없는 上言으로 봉입하는<sup>36)</sup> 방법 등을 강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같은 방법은 근실을 피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영남유생들은 근실을 받지 않는 새로운 방안으로 萬人疏를 추진하게 되었다. 곧 그들은 ‘萬’이라고 하는 용어는 수적 개념이 아니라 ‘萬邦’이 天下를 의미하듯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萬人疏’를 친하 모든 사람이 부정하지 않는 公論으로 규정해 근실을 거부하는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뒤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柳道洙를 소두로 한 영남만인소에 대해 承政院에서 疏草와 더불어 謹悉을 요구했을 때, 그가 만인소는 원래 근실 없이 劄문에 올릴 수 있는 것이라<sup>37)</sup>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던 것도 그

33) 『太學誌』 권6, 章甫 儒疏.

34) 『英祖實錄』 권124, 51년 2월 丙戌 “命太學掌議 以京鄉人 參半差出”

35) 『正祖實錄』 권26, 12년 11월 丁亥.

36) 正祖 12년(1788) 安東儒生 金鎮東 등의 「進戊申倡義錄疏」는 ‘上疏’가 아닌 ‘上言’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謹悉을 피하기 위하여던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관행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대 이후 영남유생의 상소가 만인소의 형태를 지향했던 사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 3. 柳道洙의 公論觀과 萬人疏 疏頭薦望

#### 1) 政治哲學과 公論認識

주지하는 바와 같이 閩山 柳道洙(1820~1889)가 활동하던 19세기 후반은 조선왕조가 대내·외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 같은 상황은 이미 正祖의 사망 이후 戚族勢力이 왕실을 배경으로 勢道政權을 수립하면서 예고되고 있었다. 그들은 왕의 측근에서 王道政治의 구현을 위해 보좌하는 世道의 원리를 왜곡하며 왕권을 능가하는 배타적인 독점권력 체제를 확립하는데 그것을 활용했다.

이를 토대로 그들은 비판적인 세력의 등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邪獄의 방법을 동원해 타격을 가하며 정치적 파탄을 유발했다. 또한 그들은 국가경영의 철학과 방향을 모색하기보다 사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어 田政·軍政·還穀 등 三政의 문란으로 상징되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더구나 세도정권의 국가경영 철학의 부재는 급기야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안목은 고사하고 외세의 침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조선왕조가 총체적 모순을 노출한 가운데 질서 자체에 대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며 멸망의 위기에까지 물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세도정권에 의해 초래된 그 같은 암울한 상황은 조선의 전통적인 사림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체제유지에

37) 『閩山遺稿』, 「疏廳日錄」 乙亥年 3월 3일.

강한 집착을 갖고 있던 사림세력은 전반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그 방향은 성리학적 세계관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찾고자 했다. 사림세력이 각각의 독자적 현실인식과 대응자세를 확립한 가운데 기호지방의 華西學派와 蘆沙學派, 영남지방의 定齋學派와 寒洲學派로 대표되는 새로운 학파를 형성하며 결속하게 되는 사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sup>38)</sup>

그들은 衛正斥邪論이나 東道西器論을 앞세워 전통적 사고와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범주에서 모순의 극복과 함께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성리학적 세계관 대신 서구의 사조를 수용하여 새로운 방식에 입각해 사회모순과 민족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開化論을 제시하는 부류도 없지 않았지만 대세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이같이 사림세력이 개혁의 방향에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高宗의 즉위와 더불어 집권한 興宣大院君이 추진한 일련의 개혁은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오고 있었다. 개화를 근본적으로 거부한 채 체제유지를 통한 고식적인 병폐의 제거를 지향한 대원군의 개혁은 전통적 질서 속에서 개혁방향을 모색하던 그들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특히 備邊司를 무대roman 戚族체제를 약화시키는 대신 議政府 기능의 강화를 통해 國王체제를 강화한 조치는<sup>39)</sup> 보편적 공론을 중시하는 사림정치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柳道洙가 1866년(고종 3) 右議政에 발탁된 族祖 洛坡 柳厚祚로 하여금 군주의 보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국 역대 정승들의 功過를 분석한 『相鑑博議』를 저술하여 보내고, 그와 함께 朱熹의 呂氏鄉約 시행을 왕에게 건의하도록 촉구한<sup>40)</sup> 것도 대원군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을

38) 권오영, 『조선후기 유럽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9) 大院君의 개혁방향에 대하여는 김병우, 『대원군의 통치정책』, 해안, 2006. 참조.

40) 『關山遺稿』, 「北薦芹曝錄」 “臣嘗於洛坡相臣拜相之日 篇成相鑑一冊 以勉贊襄聖化之道 又請奏請施行朱文公所增損呂氏鄉約”

것이다. 또한 그는 유배 중 『大學』의 원리에 입각하여 왕에게 국가경영 철학의 정립을 조언할 것을 기대하며 『北遷芹曝錄』을 저술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자신이 『大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린 「大學圖」는 과거 李滉이 宣祖에게 聖學의 방법을 제시한 『聖學十圖』 가운데 제4도 「大學圖」와는 다른 뜻에서 만든 것이라<sup>41)</sup>며 차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러한 그의 차별선언은 물론 이황의 성리학적 세계관의 극복 내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이황의 「대학도」는 勳戚政權이 붕괴된 뒤 새로 즉위한 선조에게 올린 것으로, 勢道政治의 청산을 염두에 두고 저술한 그의 「대학도」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황의 그것이 「성학십도」의 일부분으로서 군주의 聖君化를 위한 단계적 방안제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포괄적인 해석에 그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비해 그의 「대학도」는 상세한 설명을 부연함으로써 군주의 성군화와 더불어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그가 이황의 「대학도」와의 중첩된 진달을 피하면서 註解를 일일이 붙여 뒤에 발췌가 가능하도록 했다<sup>42)</sup>고 밝힌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결국 유도수의 일련의 저술은 시대적 변화상황에서 대두한 각종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라 하겠으며, 그 저변에는 대원군에 의해 추진되고 있던 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사림의 위상강화와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柳道洙가 제시한 개혁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朋黨과 公論에 대한 그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봉당정치와 공론정치는 사림정치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림세력의 역학관계를 보장한

41) 『閩山遺稿』, 「北薦芹曝錄」, “此圖與退陶李文純公所摸進聖學十圖中大學圖 義蓋不同”

42) 『閩山遺稿』, 「北薦芹曝錄」, “故臣不以瀆陳疊床爲嫌 而凡作圖條例 亦皆註解 圖下以備 方采巷謠之 或有其日矣”

붕당정치는 공존과 견제의 원리를 실현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忠逆是非를 전개하며 왕위계승까지 개입하는 파탄적 양상을 보임에 따라 영조와 정조의 蕩平策에 의해 급격하게 쇠퇴하는 양상을 보였다.<sup>43)</sup> 이와 더불어 재야유생을 포함하는 사림의 공론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됨으로써 존립의 기반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소수의 戚族 및 그들과 연계한 세력에 의한 세도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견제를 받지 않는 독점적 권력에 의한 각종 병폐가 유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가 붕당과 공론의 정비를 통한 새로운 정치질서 정립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한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유도수는 外戚의 정치개입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극도의 혐오감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漢 成帝의 스승인 張禹와 哀帝 때 재상인 孔光에 대한 그의 평가에서도 엿볼 수 있다. 張禹는 나라에 재앙이 닥쳐 모든 선비들이 왕의 외숙인 王鳳과 그 일족이 전횡을 저지른 때문에 하늘이 내린 경고라며 공격할 때, 成帝가 거기에 공감하며 그에게 견해를 묻자 새로 배운 小生들이 어지럽게 말하여 나라를 그르치니 믿을 수 없다며 왕씨 일족을 옹호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도수는 장우가 임금의 믿음을 얻은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닥칠 때 나라의 안위를 염려하기보다 요직을 갖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화액을 면하기 위해 忠言을 亂言이라 왜곡했다<sup>44)</sup>고 비난했다.

또한 유도수는 孔光이 왕실의 외척인 董賢이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을 알고 그가 지나갈 때 수레에서 내려 인사를 한 사실에 대해 임금의 마음에 들도록 영합하고 권세에 아첨하는 소인의 전형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43) 金成潤, 『朝鮮後期 蕩平政治研究』, 지식산업사, 1997.

44) 『閩山遺稿』, 「相鑑博議」上 張禹.

대저 經書를 통달하고 옛 것을 배웠다는 선비가 신하들의 부러움을 사고 천자의 신뢰를 깊이 받는 관록과 은총에도 불구하고 부귀 앞에 구차하고 나약해져 자립하지 못하였다. 자신에게 돌아올 화를 면하려고 국권을 농락하는 자에게 간사하게 빌붙어 세력을 조장하도록 도와주고 여론을 가장해 불의를 일삼는 무리들을 옹호했다. 강직하고 단호하지 못해 동요하기 쉬운 유생들을 두려움에 떨도록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야 할 의리를 가벼이 바꿔 그들과 결탁해 자신의 안위만 추구했다. 權臣들이 천자의 뜻을 거스르는 데에도 천자가 그들을 미워할 수 없도록 했으며, 公門을 저버리면서까지 감히 私室에 들어가고자 했다. 선비의 도를 가장하여 임금을 망각하고 나라를 그르쳤던 자가 고금을 통하여 몇 사람이나 있었던가. 張禹와 孔光是 진실로 경계할 자이다.<sup>45)</sup>

라고 하여 張禹와 함께 그를 대표적인 소인으로 지목하며 세도정치에 대한 불신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던 것이다.

유도수는 척족들의 권력집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왕권강화를 통한 군주중심의 정국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변화된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상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상의 역할은 임금으로 하여금 옛날의 바른 학문을 상고하여 善·惡의 귀결을 밝히고 忠·邪의 분별을 판단하여 명확하면서도 지극한 도를 따르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과거의 고식적인 구조가 반복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정치가 침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sup>46)</sup>는 것이다.

그 같은 유도수의 입장은 군주가 권력 또는 사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소인들을 배척하고 公道를 지향하는 군자들을 발탁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당시의 시급한 과

45) 『閩山遺稿』, 「相鑑博議」上 孔光.

46) 『閩山遺稿』, 「相鑑博議」上 序 “必使人主監于成憲 稽古正學 明善惡之歸 辨忠邪之分 曉然趨道之至正 不爲後世駁雜之政所牽滯 不爲流俗因循之論所遷改”

제는 부국강병보다 군자가 폭넓게 조정에 포진한 가운데 도학적 질서수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로 보았다. 그가 예의와 엄치가 나라를 扶護하는 기강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부국강병을 우선했을 뿐만 아니라 죽기 전 桓公에게 배척할 사람만 지목하고 어진 선비를 추천하지 않은 管仲을 비판한<sup>47)</sup>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그는 西學을 매개로 조선의 내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通商을 앞세워 개방을 요구하는 외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보강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도덕과 명분에 투철한 군자들의 주도에 의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적 결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아침을 일삼는 무리들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正學인 성리학에 입각한 질서를 수립해 邪說이 발호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변방이 불안한 상황에서 임금과 신하가 모두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이 교묘하게 아침하는 말만 일삼고 하늘의 재앙도 讖緯에 의존해 낭설을 퍼뜨리는 현실을 비판하며, 常道の 정착과 더불어 將相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sup>48)</sup> 眞德秀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던 것이다.

군자의 폭넓은 발탁과 모순에 대응하기 위한 결속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정치 집단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도정권이 독점적 권력유지를 위해 정치세력의 調劑를 원리로 하는 蕩平策을 악용하여 朋黨을 타과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그것을 기피하는 관행이 유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자의 정치집단화는 또 다른 土禍를 야

47) 『閩山遺稿』, 「相鑑博議」上 管仲.

48) 『閩山遺稿』, 「北薦芹曝錄」 “今邊事方殷 正君臣戒懼之日 而薦臣大夫 工爲諛說 或以五福足特爲言… 惟陛下鑑天人之相 因察諛佞之有害 益修其本 以格天休宗社之慶也”

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黨禍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봉당에 대한 인식변화가 불가피한 일이었다.

柳道洙가 歐陽脩·朱熹의 朋黨論에 근거해 봉당이 군자집단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군자의 정치세력화를 지지하고 나선 사정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무릇 소인들의 黨同伐異라는 것은 서로 배척하고 지원하면서 公事를 빙자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봉당을 만들어 권력을 도둑질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은 항상 서로 상반된다. 군자가 지위를 차지하면 소인이 배척되고 소인이 권력을 잡으면 군자가 배제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군자의 부류는 道德·學行·氣節·論議로 뭉치기 때문에 궁하면 서로 도와주고 영달하면 서로 양보해 밀어준다. 진실로 그 어질다는 것을 알면 친구라 할지라도 혐의를 피하지 않으며, 만약 그 재능이 아니면 차라리 대접은 후하게 할지라도 관직에 임용하지 않는다. 소인을 물리칠 때 나의 의견과 다른 것을 걱정하지 않고 어진 사람을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을 미워하니 그 마음가짐이 공정한 곳에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소인은 모여서 당을 만들어 才智·邪慝·恩知·勢利로 어울리기 때문에 궁하면 서로 소원해지고 영달하면 서로 친해진다.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하여 헛된 명예를 바라고 爵位를 남발하며 사사로운 은혜를 베푼다. 군자를 배척하는 것은 忠言이 임금에게 통하여 권력이 자신에게서 멀어질까 두렵기 때문이니 그 마음가짐은 사사로운뿐이다.<sup>49)</sup>

라고 하여 봉당을 경계하면서도 군자집단과 소인집단을 구분하여 군자의 정치 집단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용인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柳道洙의 자세는 唐 憲宗代 정승 裴度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裴度는 皇甫鎛 등의 소인들이 발탁되자 그들과 근무하기를 꺼려 사직상소를 올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황제는 그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는 朋黨을 만드는 행위라며 질책했다. 그러자 裴度는 군자가 무리를 이

49) 『閩山遺稿』, 「相鑑博議」上 牛僧儒.



루면 ‘同德’이라 하고 소인이 무리를 만들면 ‘朋黨’이라 하는 것으로, 외형은 서로 비슷한 것 같으나 내용은 현격하게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유도수는 배도가 소인들과 서로 다투어 나아가려 하지 않고 사직상소를 여러 차례 올린 것은 幾微에 밝은 때문이었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가 봉당의 의심을 받았을 때 邪·正의 논변을 분명하게 한 것은 학문의 방법이 정밀한 때문이었다<sup>50)</sup>고 평가하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宋 仁宗代 杜衍이 정승이 되어 韓琦·范仲淹 등의 군자를 발탁하고 간신의 무리들을 배제한 것을 두고 夏竦 등이 黨人으로 비난한 사실에 대해, 歐陽脩가 소인은 利害로 모이고 군자는 道로 모이기 때문에 소인에게는 朋이 없고 군자에게만 있을 뿐이라며 옹호했던 사실을 소개하며<sup>51)</sup> 궁극적으로 봉당은 군자집단으로서 장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같은 그의 입장의 저변에는 구양수가 朋黨을 군자의 집단인 眞朋과 소인의 집단인 僞朋을 구분한 가운데 군주가 利祿과 財貨가 아닌 道義와 名節로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眞朋을 용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sup>52)</sup> 사실을 환기시켜 군자당과 소인당의 분별을 통한 군자집단의 봉당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도수의 봉당을 옹호하는 그러한 자세는 궁극에 나라의 존망과 연결시키는 것으로까지 진전되고 있었다. 그는 南宋 寧宗代 韓侂胄가 李沐·胡紘 등을 앞세워 性理學을 僞學이라 규정하고 朱熹 등을 위학에 매몰된 黨人이라 비난한 것이 결과적으로 송의 쇠락을 가져와 멸망에 이르게 했다<sup>53)</sup>고 주장했다. 이는 주희가 봉당이 黨禍를 불러오기 마련이라는 승상 留正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50) 『閩山遺稿』, 「相鑑博議」上 裴度.

51) 『閩山遺稿』, 「相鑑博議」上 杜衍.

52) 『歐陽文忠公集』 권17, 論 朋黨論.

53) 『閩山遺稿』, 「相鑑博議」上 趙汝愚.

그러나 朋黨의 禍는 縉紳에게 그칠 뿐입니다. 오히려 붕당을 혐오해 없애고자 했을 때 종종 亡國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 賢·否와 忠·邪를 살피지 않고 오직 黨을 없애려는데 힘쓴다면 小人으로 교활한 짓을 도모하는 자들은 필시 그 흔적을 덮어 버릴 것이고, 君子들은 서로 믿고 公道를 함께 도모할 길이 없어져 서로 배척해 黨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漢·唐과 紹聖(宋 哲宗)때의 일이 먼 지난 일이 아닙니다.<sup>54)</sup>

라며 붕당을 없애면 오히려 奸黨의 전횡이 초래되어 나라가 멸망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한 점을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였다.

그런데 유도수의 한탁주에 대한 평가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사대부를 黨인으로 몰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 위력과 형벌을 앞세워 천하의 입을 막으며 公論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만약 한탁주가 北伐을 추진할 때 바른 말로 부당함을 역설한 사람이 있었다면 南宋이 兵亂을 겪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죽음을 당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결국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공정한 마음으로 公論을 따르려는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나라의 멸망을 불러오게 되었다<sup>55)</sup>는 것이다.

붕당정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론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설령 붕당의 군자당화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역학관계가 조성되어 있는 한 현안에 대한 시각차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시각차를 극복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공론인 셈이다. 사실 조선시대 공론정치는 정치참여 가능층의 확대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 굴곡과 파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군주와 사림세력의 합의에 따른 정국운영의 근간으로 존속하였다.

54) 『朱文公文集』 권28, 書 與留丞相書(4月 24日).

55) 『閩山遺稿』, 「北薦芹曝錄」 “往者 侂冑弄權 以威罰箠 天下之口 浸淫既久 附和成風 北伐一事 中外共知其非 而莫敢言其效 蓋可睹矣 使侂冑能虛心平聽 不以先入爲主 而惟公論是從 則國無加兵之禍 已無僇辱之殃 豈不美哉”

공론정치는 사림세력이 상호 공존과 전체의 논리로서 적용해 온 朋黨政治의 黨論대결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었다. 봉당체제가 군주를 비롯한 권력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세력의 黨論대결을 公論대결로 간주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조선왕조 정치는 현실적으로 봉당과 공론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으나, 명분상으로는 봉당을 부정하고 공론을 용인하는 이율배반적 형태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sup>56)</sup> 19세기 세도정치로 인한 봉당정치의 쇠퇴와 더불어 공론정치의 부진이 초래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겠다.

柳道洙는 공론이 신장되고 위축되는 것은 곧 治·亂과 存·亡이 나누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 규정하며, 당시의 상황이 바로 공론이 屈·伸하는 분기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바른 말하는 사람을 두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보답한다고 간주해 시기하는 마음 없이 들어줄 성의가 있으면 공론이 신장되고, 일을 방해하고 명성을 바란다고 하면서 들어서 쓸 성의가 없이 시기하는 마음만 있으면 공론이 위축되리라<sup>57)</sup>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면서 존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론의 신장을 통한 공론정치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라는 의식이 함축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수는 지극히 공평한 논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법이라 전제하면서, 眞德秀가

신이 듣건대 公論은 나라의 元氣라고 했습니다. 원기가 모자라면 사람이 될 수 없듯이 공론이 막히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祖宗의 융성한 시대에는 사람

56)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2002.

57) 『閩山遺稿』, 『北薦芹曝錄』 “今日實公論屈伸之機 朝廷之上 若以言者 爲愛君 爲報國 無猜忌之意 而有聽用之誠 則公論自今而愈伸 若以言者 爲沮事 爲要名 無聽用之誠 而有猜忌之意 則公論自今而愈屈 公論屈伸 乃治亂存亡之所由分”

을 등용하고 政事를 세우는데 한결같은 도리에 따라 지극히 공평하게 행했기 때문에 民心이 기꺼이 복종하고 천하가 순조롭게 다스려졌던 것입니다. 熙寧(宋 神宗) 때 新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공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王安石이 그 공론을 거역하여 마침내 나라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紹興(宋 高宗) 당시 (여진족과의) 和議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론이었는데, 秦檜가 그러한 공론을 원수처럼 미워하여 (적과 내통해) 나라의 환란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sup>58)</sup>

라고 한 주장을 인용하며 올바른 정책판단을 위해서는 공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조정의 처사가 옳는데 백성도 옳다고 하면 잘 다스려진 세상이고, 조정의 처사가 잘못된 것을 두고 백성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도 잘 다스려진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잘못을 논평할 수 없도록 공론을 통제한다면 나라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이는 결국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군주의 공론수용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공론의 신장여부는 군주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물론 權臣에 의한 권력집중을 배제하고 군주의 정국주도권 장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유도수가 공론의 신장과 더불어 군주의 諫爭에 대한 포용을 강조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군주가 신하의 간하는 말을 따르면 聖君이 되지만 따르지 않으면 생각이 없어지기 마련이라 설명했다. 堯임금이 進善의 것만을 세운 것과는 달리 秦나라가 誹謗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고, 禹임금이 착한 말을 들으면 절을 했던 것과는 달리 紂王은 간하는 말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라를 망치게 되었다<sup>59)</sup>는 것이다.

그러나 지붕이 새는 사실은 위에서 알기는 힘들어도 빗물이 떨어지는 아

58) 『閩山遺稿』, 「北薦芹曝錄」.

59) 『閩山遺稿』, 「北薦芹曝錄」 “從諫則聖 而疎諫則罔念 是以堯設進善之旋 而秦有誹謗之律 禹聞善言則拜 而紂足拒諫之智”

래에서는 알 수 있듯이 아랫사람의 주장을 수용할 자세를 갖추어 폭넓은 국가경영의 안목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晉文公이 수레를 끄는 백성들의 비방까지 수용함으로써 善政을 이룰 수 있었고, 唐太宗 역시 공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왕에게 아뢰어 일을 있을 경우 監門司馬의 인도를 받아 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太平을 이룰 수 있었다(60)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군주의 간쟁을 통한 공론의 수용이 조정의 관료에 국한하지 않고 재야유생을 포함한 백성들까지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결국 柳道洙가 『相鑑博議』의 저술과 더불어 「大學圖」를 그려 상세한 설명을 더한 것은

날마다 經筵에 나아가 六經을 읽고 외우면서 여러 성인을 대하며 聖學의 자료로 삼고, 『大學』의 공부에 힘쓰면서 萬機의 여가에 돌아보면 孔子와 曾子が 스승이 되고 程·朱 이하 선현들이 侍講으로 강론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착한 것을 밝히고 몸을 성실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도리도 다른 곳에서 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 經書에 밝고 행실을 닦은 선비를 가려서 講官으로 삼고 또 言路를 넓게 열어 聖聽을 통달하도록 하십시오. 舜임금도 농사짓고 웅기를 만들며 고기를 잡으면서도 남에게 얻어 들은 것을 善으로 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四方의 눈을 눈으로 삼아 사방의 눈을 밝혔으며, 사방의 귀를 귀로 삼아 사방의 귀를 통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聖王이 간하는 신하를 중하게 여겨 耳目으로 삼고 천하의 公議가 막히고 가려지는 근심이 없도록 하는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61)

라고 하듯이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군주의 聖君化를 전제로 공론을 우선하

60) 『閩山遺稿』, 「北薦芹曝錄」, “臣聞屋漏在上 知之在下 政事有關 必訪傍議 晉文聽與人之誦 (鄭)子產採柳校之謗 卒成善政… 唐太宗躬勤政理 明於聽受 著司門式云 其無門籍人 有論奏者 皆令監門司馬引對 不許關礙”

61) 『閩山遺稿』, 「北薦芹曝錄」.

는 사람정치 원리를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수는 정치세력의 정비를 통한 봉당정치의 재확립과 사림을 포함한 광범한 언론을 수용하는 공론정치의 정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이 조선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외세의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책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조선왕조의 이념과 질서를 견지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그것을 토대로 변화된 시대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계기적인 개혁방향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개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왕권강화와 위정척사를 근간으로 외세를 배격할 가운데 자주적 개혁을 추진한 대원군의 정치적 복귀를 위해 영남사림의 공론을 결집한 만인소의 소두로 나서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 2) 疏頭薦望과 萬人疏 捧入

高宗의 즉위와 더불어 執政한 興宣大院君은 王室의 위상 및 기능강화를 통한 강력한 개혁의 추진으로 조선왕조의 질서를 재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신호탄이 바로 景福宮의 중건이었다. 조선왕조 건국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경복궁의 중건은 국가운영의 주체가 戚族이 아닌 王室이라는 사실을 표방하는 것으로, 安東金氏와 豐陽趙氏의 척족에 의한 勢道政權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동안 전횡을 일삼던 척족세력을 권력에서 배제하는 대신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한 전제군주 국가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다. 그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宗親府의 기능을 정비해 군주 및 자신의 친위조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戚族의 권력기반인 備邊司의 권한을 대폭 議政府에 이양한 것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대원군의 왕권강화를 전제로 한 그 같은 조치는 궁극에 그의 정치적 기반

강화와 정국주도권 확보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세도정권의 배타적 권력독점과 정치철학의 부재에 시달려온 사림세력에게는 환영의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1866년(고종 3) 丙寅洋擾와 1871년(고종 8) 辛未洋擾 등 외세의 도전에 보여준 대원군의 적극적 대응은 전반적으로 衛正斥邪의 사고를 고수하던 사림들의 지지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뒤에 柳道洙가 대원군의 봉환을 촉구하기 위한 疏草에서

생각건대 우리 大院位께서는 殿下의 親父이자 東方의 大老입니다. 나라의 政事를 대리하며 조정을 진작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았으며, 규율을 정비하여 기강을 바로 세웠으며, 전하를 保養하여 聖君으로서의 덕을 닦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내·외를 진정시켜 사람들이 평온하면서도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교활한 적들에게 신령스런 위엄을 보이며 멀리서도 복종하게 했으며, 군사 무기를 수리하여 만약의 兵禍에 대비하게 하였으며, 洋學을 물리쳐 간사한 분위기를 단절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실로 孟子가 楊朱를 물리친 업적과 다를 바 없으니, 그 공이 禹임금의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까.<sup>62)</sup>

라며 대원군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시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에 의한 일련의 개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기도 했다. 특히 그가 사회·경제적 병폐제거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書院毀撤은 사림의 정치·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림 일각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원이 폐단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질서의 재정립이라는 과제가 공감되는 현실에서 개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대신 그들은 대원군의 정권이 세도정권을 대신한 또 다른 독점 권력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로 인한 폐단을 지적하며 공격에 나섰다. 고종 10년(1873) 同副承旨 崔益鉉이

62) 『蘭山遺稿』 권1, 疏 擬疏.

최근의 일들을 보면 政事에서는 옛날 법을 변경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인재를 취하는 데에는 나약한 사람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大臣과 六卿들은 아뢰는 의견이 없고 臺諫과 侍從들은 일을 벌이기 좋아한다는 비난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속된 논의만 마구 떠돌 뿐 정당한 논의는 사라지고 있으며, 아첨하는 사람들만 뜻을 펴고 정직한 선비들은 숨어버렸습니다.<sup>63)</sup>

고 하여 대원군의 집정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 것도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물론 최익현은 이 상소로 인해 투옥되었지만, 그것은 조정의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켜 급기야 高宗의 親政論이 제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왕의 친정이라는 명분 앞에 대원군도 별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그가 추진한 일련의 개혁의 목표가 왕권강화를 토대로 한 군주의 정국 주도권 확보에 있었던 만큼 친정론의 대두는 개혁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대원군은 정서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수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고종의 친정은 대세를 이루어 가시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가 왕의 친위체제 강화를 골간으로 하는 宿衛軍 증강과 斥和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던 巡武營의 축소에 반발하여 掃墳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이 빌미가 되어 楊州 直谷에 은거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결과의 산물이었다.<sup>64)</sup>

대원군의 直谷 은거는 영남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었다. 여기에는 대원군의 屏虎是非의 해결을 위한 保畝추진과 맞물려 실시된 서원철폐의 상관관계가 작용하고 있었다. 사실 대원군은 집권 후 그동안 정계에서 소외된 영남사람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영남에 많은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sup>65)</sup> 집권 당시에는 柳厚祚를 정승으

63) 『高宗實錄』 권10, 10년 10월 庚子.

64) 김병우, 『대원군의 통치정책』, 혜안, 2006.

65) 대원군은 집권하기 이전 상주 柳厚祚의 집에 머물기도 하는 등 영남을 순방한 적이 있으며, 당시 영남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별한 대접을 받으며 교분의 폭을 넓힌 것으로



로 발탁하고 李源祚를 공조판서에 임명하기도 했다. 그가 영남사림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던 屏虎是非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保습에 나서게 되는 것도 그러한 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대원군은 1866년(고종 3) 3월 유후조를 우의정으로 임명한데 이어 安東府使 沈東臣에게 屏派와 虎派 대립의 현안인 李象靖의 追享에 따른 位牌遷動是非의 진상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보합을 위한 조정책을 거부하는 자를 적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다. 이는 柳厚祚가 是非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대원군에게 보합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었다.<sup>66)</sup> 그러나 그의 지시는 南鍾三 등 선교사를 처형한 邪獄과 프랑스 함대의 공격에 의한 洋擾 등 일련의 사건들과 맞물리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sup>67)</sup>

1870년(고종 7) 8월 대원군은 다시 안동부사 朴濟寬에게 자신의 편지를 우선 柳厚祚에게 보여주되 병파와 호파의 유생들에게도 보여 保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 안동부에서 8월 27일 병파와 호파의 유생들이 虎溪書院에 모여 보합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음을 보고하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을 우려한 유후조가 다시 대원군에게 위폐의 봉안에 대한 儀節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대원군은 元子が 탄생하는 국가적 경사를 앞두고 사사로운 일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논리를 앞세워 그에게 보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sup>68)</sup>

추측되고 있다(정진영, 「19세기 후반 嶺南士林의 정치적 동향」, 『지역과 역사』 4, 부경역사연구소, 1997).

66) 『屏虎保合顛末』, 洛坡相公上大院君書(庚午八月十八日) “往在丙寅春 小生以屏虎保合事仰陳 而閣下亦有所留念者 至有往復於其時”

67) 『屏虎保合顛末』, 大院君與花山倅沈東臣書(丙寅三月, 纔下書 洋堅鞫獄大作 無暇於保合故遂寢).

68) 『屏虎保合顛末』, 大院君答洛坡書(庚午八月二十三日).

8월 27일 호계서원 崇敎堂에서의 회합은 유후조가 우려했던 대로 사당의 문을 폐쇄하고 보합을 추진하지는 虎派와, 열어두고 보합해야 한다는 屏派의 주장이 맞서는 바람에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대원군은 크게 화를 내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시비를 국가적 사건으로 간주해 忠·逆의 기준에서 論斷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비치며 시급히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대원군은 보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은 병파가 강고한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으로 간주하며 사문의 죄인이 되는 한이 있어도 해결할 것이라<sup>69)</sup>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三溪書院에서 屏山書院에 通文을 보내 보합을 촉구하고 柳道性이 金尙欽과 편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황은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병파와 호파 사이에 보합의 분위기가 마련되었고, 대원군은 보합의 상징적인 조치로 병파와 호파가 각각 자파의 주장을 담은 『廬江志』와 『大山實記』의 木板 및 刊本을 불태우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1870년(고종 7) 12월 14일 대구 감영의 觀德堂 앞에서 이들 책과 함께 목판이 모두 소각되기에 이르렀다.<sup>70)</sup>

그런데 병파와 호파의 이러한 보합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호계서원이 시비의 핵심으로 부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대원군이 서원철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호계서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미 대원군은 고종 5년(1868) 전국의 書院·祠宇 가운데 賜額되지 않은 것은 毀撤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69) 『屏虎保合顛末』, 大院君與崔判書遇亨書 “俄見柳(驥榮)李(晚蒼) 又見判樞丈書 得聞屏虎之論 又見本倅之書 則所謂屏邊之所執 外施承順之樣 內實欲勝之心 大抵 此邊事 如此不肯 歸我於師門之罪人 可乎”

70) 그러나 이로써 屏虎是非가 종식된 것은 아니었다. 『廬江志』와 『大山實記』의 소각 이후 병파와 호파가 안동부사의 주선으로 8월 28일 회합한 이래 보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호파에서는 병파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廬江顛末』(信), 『再會崇報堂日記』).

이에 따라 영남의 賜額院宇 72개소를 제외한 未賜額院宇 639개소의 대부분이 褫奪대상이었다.<sup>71)</sup> 그 결과 안동지역에는 陶山書院을 비롯해 屏山書院·虎溪書院과 三溪書院(權撥)·周溪書院(具鳳齡·權春蘭)·西澗祠(金尙憲) 등 사액된 院宇들만 褫奪대상에서 제외되어 존속하게 되었다.<sup>72)</sup>

그러나 대원군은 1871년(고종 8) 3월 다시 사액된 서원이라 할지라도 疊設된 서원을 褫奪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文廟에 配享된 인물과 忠節 및 大義가 귀감이 되는 인물이 제향된 전국 47개소의 院宇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褫奪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sup>73)</sup> 그가 갑자기 이러한 강공책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안동지역에서는 陶山書院과 함께 屏山書院만 존속이 확정되고 호계서원을 포함한 다른 서원들이 모두 褫奪대상이 된<sup>74)</sup> 점으로 미루어 屏虎是非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해 4월 9일 서원褫奪을 지시하는 關文이 호계서원에 도착하자 虎派의 사람들은 병산서원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의혹을 품기도 했으나,<sup>75)</sup> 곧바로 서원의 존속을 위한 공론형성에 들어갔다. 4월 15일 호계서원의 발의로

71) 李樹煥, 「大院君의 書院毀撤과 嶺南儒疏」, 『嶺南史學』 6, 영남대 국사학회, 1994.  
 72) 당시 안동에는 이들 院宇 외에도 金誠一을 제향한 臨川書院과 金璣 및 金克一·金守一·金明一·金誠一·金復一 등 五父子의 위패가 봉안된 泗濱影堂 등 미사액원우들도 褫奪을 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868년(고종 5년) 존속 당시 이들 院宇와 함께 사액서원인 屏山書院을 함께 거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屏虎是非의 현안을 감안한 때 문으로 풀이된다. (『泗濱志』, 同治戊辰十月初七日到付巡營甘結)  
 73) 『承政院日記』 고종 8년(1871) 3월 20일(경술).  
 74) 당시 褫奪대상에서 제외된 영남의 원우는 모두 14개소로, 玉山書院(慶州)·西岳書院(慶州)·屏山書院(安東)·陶山書院(禮安)·紹修書院(順興)·道東書院(玄風)·興巖書院(尙州)·玉洞書院(尙州)·金烏書院(善山)·濫溪書院(咸陽)·忠烈祠(東萊)·彰烈祠(晉州)·忠烈祠(固城)·褒忠祠(居昌)만 남게 되었다.  
 75) 『盧江顛末』(信), 辛未四月初九日 “蓋自戊辰以後 吾鄉各處書院 幾盡撤毀 惟本院及三溪周溪屏山西澗五院 巋然獨存 至是 四院又入於關飭之中 而屏山得免 蓋其一脈根因 終至貽禍八路 可勝痛哉”

영남의 휘철대상 원우의 사림들이 西岳寺에 모여 道會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義城鄉校의 도회에서 3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鄭民兼을 소두로 하는 疏任이 확정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6월 15일 10,027명이 연명한 서원휘철반대 영남만인소가 봉입되었지만, 대원군에 의해 쫓겨남으로써 소득 없이 마무리되고 말았다.<sup>76)</sup> 이에 따라 호계서원도 휘철의 절차에 들어가 그해 9월 9일 廚舍를 허무는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영남사림의 대원군에 대해 갖는 인식은 호파가 부정적인데 비해 병파가 우호적인 상반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군이 直谷에 은둔하며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은 호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병파로서는 좌시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대원군의 봉환을 촉구하기 위한 영남사림의 공론형성을 병파가 주도하게 되는 사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인소로서 영남사림의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파의 동의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호파를 배제한 병파의 일방적인 공론형성은 명실상부한 공론화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기치 못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면 호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保畧의 인물이 선택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유도수가 疏頭로 추천된 배경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호파의 대표적 인물인 金道和는 柳道洙의 行狀에서

甲戌年(1874)과 같은 일은 사람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위태롭고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논의가 명쾌하였고, 지척에서 임금의 위엄을 범하는 상황에서도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천둥과 번개도 공의 뜻을 빼앗지 못했으며, 날이 선 도끼도 공의 절개를 바꾸지 못하였다.

76) 서원휘철의 추이 및 양상과 영남사림의 휘철반대 만인소 전말에 대하여는 李樹煥, 「大院君의 書院毀撤과 嶺南儒疏」, 『嶺南史學』 6, 영남대 국사학회, 1994. 참조.

험난한 바다와 험준한 산이 가로막은 천리 밖에 있으면서도 마치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는 듯했으며, 모진 풍상 속에서 10년을 견디면서도 평상시나 다를 바 없는 자세로 일관했다. 비록 宋代 直言으로 湖海에 유배된 澹庵(胡銓)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sup>77)</sup>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도수의 出處에 대해 항간에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전하면서 영남의 첫째가는 선배인 活齋 李榘와 俛庵 李堦라 할지라도 이러한 임무가 주어졌다면 사양하지 않고 그 같은 출처의 의리를 지켰을 것이라<sup>78)</sup>며 옹호하기도 했다.

柳道洙의 出處에 대한 의혹은 대원군 봉환 영남만인소의 소두가 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이는 호파에서 제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그는 당시 병과의 핵심인물인 柳厚祚의 族孫으로 그가 정승으로 재직할 때 『相鑑博議』를 저술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邪學이 만연된 현실의 극복 방안으로 탄압 일변도의 대응보다 正學의 진흥을 위한 土風의 진작을 우선할 것을 조언하는<sup>79)</sup>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그는 일찍이 族叔인 柳嘯陸에게서 학문을 습득하며 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그가 사망한 뒤 「言行錄」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그는 親系 혈통상으로 병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金南運의 딸을 배필로 맞이하는 등 의성김씨를 중심으로 한 호파와도 혈맥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병과와 호파의 중립적 위치에서 保畬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그는 대원군에 의해 병과·호파의

77) 『閩山集』 권8, 附錄 行狀.

78) 『閩山集』 권8, 附錄 行狀 “或者以公之出處爲疑 然本事之關係 莫重多士之屬望 有在公於此時 寧可苟且圖免 自陷於吾君不能之科哉 吾嶺一番先輩 若活齋俛庵諸先生 皆當是任 出處之義 如此 此公之所以不得辭也”

79) 『閩山集』 권4, 書 上洛坡先生 “仄聞德山事變後 朝議逮捕異類 衛道善俗 固是爲士者已分內事也… 大監前歲 關諭講學之舉 不惟佐治之本原 正法實爲救時之急務 顧土風不振 承行不力 而斷不可以已試不驗 而弛其施教 亦不當以王道難行 而俯詢伯轍也”

대립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高山書院에서 『退溪書節要』의 再刊을 추진하자 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병과의 입장에서 자체를 촉구하는 편지를 李秀瑩에게 보내기도 했다.<sup>8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파에서는 그의 출처에 의혹을 제기하고 김도화는 그를 李集과 李堉에 연결시켰을까.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李集은 효종 원년(1650) 柳樓을 疏頭로 영남유생 9백여 명이 연명한 牛栗 文廟從祀 反對上疏를 製疏한 적이 있으며, 또한 李堉는 정조 16년(1792) 영남유생 10,057명이 참여한 思悼世子 伸冤請願 萬人疏의 소두였다.<sup>81)</sup> 김도화가 이들을 영남의 대표적 선배로 꼽은 것은 그들에 의한 疏事가 鶴峰系(虎派)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도화는 유도수를 호파공론 주도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함으로써, 그가 소두가 된 만인소에 소극적인 호파의 반감을 불식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겠다.<sup>82)</sup> 병과와 호파가 명실상부한 保畬을 이루지 못한 데다 대원군에 대해 차별적 시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사람들이 柳道洙를 중심으로 결속하여 봉환청원 만인소를 봉입하는 공론 형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도수가 疏頭로 확정된 뒤 신변의 안위를 걱정하는 權靖夏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사는 모두 동의하여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또 난처하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80) 『閩山集』 권4, 書 答李丈秀瑩.

81) 李樹健, 「正祖朝 嶺南萬人疏」 『嶠南史學』 1, 영남대 국사학과, 1985.

82) 이러한 사실은 병호시비를 문중의 시비로 간주하여 혈맥 또는 혼인관계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병호시비가 西厓系와 鶴峰系의 분화에 서부터 연원하며, 두 계파 사이의 세계관을 비롯한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의 차별적 경향에 대한 계기적 검토를 전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후기 西厓系와 鶴峰系의 차별적 경향에 따른 분화양상에 대하여는 薛錫圭, 「退溪學派의 分化와 屏虎是非( I )」,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참조.

전달하는 자가 어찌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大義는 모두가 천명해 펼쳐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일로 국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그 공을 따지는 일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영남의 모든 사람들의 의논에 異同이 없도록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지나친 우려에서 나온 근심이 없지 않은 것이겠지요.<sup>83)</sup>

라며 영남사림의 공론형성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유도수는 1874년(고종 11) 10월 大院君 奉還을 촉구하는 공론형성을 위한 安東疏會에 참석하여 조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도 전에 영남사림들이 앞서 제기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그는 司果 李彙林과 司直 孫永老 등 영남출신 조관들이 잇따라 봉환을 주장하다 견책을 받게 되자 태도를 선화하여 나라의 興亡과 직결되는 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당시 柳厚祚가 그에게 적극 나설 것을 권유한 것도 자극제가 되었다. 그는 疏頭 鄭民采가 상소를 올렸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위축된 유생들을 독려하며, 대원군이 전한 만류의 의사도 수용하기를 거부했다.<sup>84)</sup>

성균관에서 영남유생의 공론형성은 鄭璣 등 星州儒生들이 1875년(고종 12) 1월 27일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며 상소를 촉구하는 통문을 보낸<sup>85)</sup> 것을 계기로 급진전되었다. 그리하여 2월 3일 疏頭의 薦望을 위한 圈點이 있었는데, 柳道洙가 9分으로 각각 5分을 얻은 金鎮誠과 李在嶠에 우선해 추천되었다. 세 차례에 걸쳐 사양하는 單子를 보내던 그는 거듭되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2월 20일 出座했다.<sup>86)</sup> 이때부터 疏事가 본격적으로 순조

83) 『閩山集』 권4, 書 與權戚叔靖夏.

84) 『閩山集』 권8, 附錄 行狀.

85) 『만인소』, 星州慕淵齋會中 通文(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도록, 2007).

86) 당시 疏頭圈點記를 비롯해 疏頭望記와 辭讓單子 등은 원본형태로 남아 전하고 있다(『만

롭게 추진되면서 3월 3일 드디어 伏閣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의 疏章은 바로 왕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미루어지다 결국 5일이 되어야 비로소 捧入되었다.<sup>87)</sup> 그들은 疏文에서 대원군의 행차는 조용한 곳을 찾아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제하면서,

우리 왕세자 책봉일이 이미 다쳐와 번다한 예식을 행하였고, 五殿의 흡족해 하시는 모습도 날로 도타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높고도 가까운 처지에 계시는 분도 똑같이 공경함이 마땅한 법인데, 경사스런 날이 또 지나가도록 還次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울적한 심사는 하루가 갈수록 더하고 이들이 지날수록 심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들의 한두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는 一道의 公論이며, 一道의 말이 아니라 전국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저희들의 건의를 기다릴 것도 없이 반드시 슬기롭게 판단해서 처리할 일입니다.<sup>88)</sup>

라며 봉환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여론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상소를 읽은 왕은 유생들의 상소에 대해 엄격히 규제했음을 환기시키면서 이들을 협잡의 무리로 규정하며 疏頭 柳道洙를 비롯해 製疏 李學洙, 都廳 李相喆·徐昇烈을 형벌을 가한 다음 遠惡地에 定配하도록 형조에 지시했다.<sup>89)</sup> 그러나 다음날 왕은 형벌을 가하는 것은 면해주되, 유도수를 吉州에, 이학수를 楚山에, 이상철을 甲山에, 서승렬을 碧潼에 각각 원배하도록 한 형조의 보고를 승인했다.<sup>90)</sup>

인소』,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도록, 2007 참조).

87) 柳道洙의 疏頭 薦望과정에서부터 捧入을 거쳐 傳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疏廳日錄』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포함한 상소의 전말에 대하여는 정진영, 「19세기 후반 嶺南儒林의 정치적 동향—萬人疏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 부경역사연구소, 1997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88) 『閩山遺稿』, 『疏廳日錄』 疏草.

89) 『高宗實錄』 권12, 12년 3월 壬寅.

90) 『高宗實錄』 권12, 12년 3월 癸卯.



유도수가 유배지로 향할 때 李炳秀는 백년의 大義는 春秋에 있었고 천리의 고매한 충성은 日月에 걸렸다<sup>91)</sup>고 평가했으며, 安鎬重 역시 한 몸으로 영남 전체의 책무를 짊어지고 한마디 말로 나라 전체의 논의를 주도한 것은 선비로서의 진정한 영광이었다<sup>92)</sup>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李教行도

나라에 義理가 扶植되는 것은 氣數 때문이고, 선비가 名行에 힘쓰는 것은 공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柳先生의 名望과 行誼는 가정에서 습득했고 총명은 세상을 밝게 비추었다. 모든 사람들의 선두에서 聯名上疏로 大義를 널리 펼치려다 임금이 귀를 막고 있는 바람에 윤희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먼 황폐한 곳으로 유배되기에 이르렀다. 생각건대 志士가 역운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시절인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치를 궁구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임금의 덕이 새로워져 해와 달처럼 환하게 비취지면 부름을 받는 행운이 찾아올 날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sup>93)</sup>

라며 그가 유배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解配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柳道洙를 주축으로 한 영남사람들이 대원군의 봉환을 위해 전개한 만인소는 결국 왕의 강고한 자세에 밀려 더 이상 공론화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그가 대원군의 복귀를 통해 실현하기를 바랐던 시대적 적합성을 확보한 변화된 사람정치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함으로써 조선 왕조는 서구적 질서수립을 강요받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았다.

91) 『閩山遺稿』, 「疏廳日錄」, 今將獨歎而東鬱鬱不欲於握別之帳 “百年大義 春秋在 千里孤忠 日月懸”

92) 『閩山遺稿』, 「疏廳日錄」, 拜呈柳首位匪所行軒 “一身而擔全嶺之責 一言而唱舉國之論”

93) 『閩山遺稿』, 「疏廳日錄」, 奉驢柳先生匪所行德.

#### 4. 맺음말

이상 1875년(고종 12) 대원군 봉환청원 영남만인소를 주도한 유도수의 공론인식과 함께 그가 소두로 천망되는 배경을 공론정치의 관점에서 검토해보았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정치는 성리학 이념에 투철하면서도 도덕과 명분을 중시한 사림이 주도한 士林政治이면서도, 정치세력의 역학관계를 보장한 가운데 봉당의 공존과 견제를 지향한 朋黨政治이자, 성균관 및 향촌 재야유생들의 상소를 통한 정치참여를 용인한 가운데 정치세력의 공론대결을 전개한 公論政治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재야사림들의 공론형성이 활성화되었고, 그들의 공론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한 재야사림의 공론형성을 통한 정치참여를 주도한 것은 영남사림이었다. 그들은 공론을 배경으로 勳戚政權을 무너뜨리는데 일익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훈척정치의 잔재청산과 사림정치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과제해결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서 東方五賢이 文廟에 종사될 당시 趙光祖를 제외한 金宏弼·鄭汝昌·李彥迪·李滉이 영남사림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영남의 남인세력이 道學의 적통으로서 명분상 우위를 점하는 발판이 되었다. 仁祖反正을 계기로 그들이 재야세력에 머물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서인세력과 文廟從祀 논쟁을 비롯한 服喪논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물론 거기에는 서인의 정치적 우위와 남인의 명분적 우위의 교차유지를 통해 정치세력의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왕권강화를 실현하려는 군주들의 정치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남인세력은 영남사림의 공론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집권세력을 견제했다. 그러나 그들의 공론형성은 영조가 유생상소는 성균관 掌議의 동의를 얻어 捧入하도록 한 謹悉體制를 확립함에 따

라 급속하게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근실은 물론 노론세력의 공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영남유생의 공론형성을 규제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사람들은 萬人疏의 방법을 동원해 근실체제의 장벽을 돌파했다. 아울러 그들은 勢道政權의 공론봉쇄를 돌파하는 도구로 그것을 활용하기도 했다. 柳道洙의 영남만인소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겠다.

유도수는 대원군이 집권한 것을 계기로 세도정치로 인해 위축된 사림정치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는 대원군이 추진하는 개혁이 성리학적 질서를 근간으로 각종 병폐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을 확인한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우의정으로서 대원군의 신임을 받고 있던 族祖 柳厚祚에게 鄉約의 시행을 촉구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相鑑博議』를 저술해 왕의 보좌에 참고하도록 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여기서 사림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봉당정치와 공론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의 봉당론은 군자의 정치집단화를 보장하는 것을 골간으로 한 歐陽脩와 朱熹의 논리에 토대를 두고 있었으며, 공론관은 유생들의 공론형성뿐만 아니라 하층민의 공론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군의 直谷 은거에 따른 실각은 유도수뿐만 아니라 영남사람의 기대를 무산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원군의 봉환을 위한 영남사람의 공론은 쉽게 형성될 수 없는 사정에 있었다. 대원군이 비록 屏派와 虎派로 분열된 영남사람의 保숨을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서원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屏山書院을 남겨둔 채 虎溪書院만 훼손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호파의 반감을 불러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영남사람의 공론을 집약해 萬人疏 捧入을 주도할 보합적 인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柳道洙가 疏頭로 천망된 사실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는 그가 병파에 속하면서도 호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향촌사회에서의 그의 위상의 일단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도수가 소두가 된 대원군 봉환청원 영남만인소는 그를 비롯한 疏任들이 유배됨으로써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와 함께 그가 대원군에 의지해 구현하기를 기대했던 사람의 공론을 토대로 역학관계를 보장하는 사람 정치 역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수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뒷날 왕에게 직접 건의할 기회가 있을 것에 대비해 유배지에서 『北遷芹曝錄』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당시 사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조선왕조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의해 正體性을 상실해가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中宗實錄』, 『明宗實錄』,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大典續錄』, 『太學誌』, 『開庵集』, 『栗谷全書』, 『歐陽文忠公集』, 『朱文公文集』, 『屏虎保合類末』, 『廬江類末』, 『泗濱志』, 『閩山集』, 『相鑑博議』, 『北薦芹曝錄』, 『疏廳日錄』.

崔異敦, 『조선중기 사림정치 구조연구』, 일조각, 1994.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金墩,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연구』, 서울대출판부, 1997.  
 金成潤, 『朝鮮後期 蕩平政治研究』, 지식산업사, 1997.  
 禹仁秀,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일조각, 1999.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2002.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김병우, 『대원군의 통치정책』, 해안, 2006.  
 유교문화박물관, 『만인소』(도록), 한국국학진흥원, 2007.  
 李樹健, 「正祖朝의 嶺南萬人疏」, 『嶺南史學』1, 영남대 국사학과, 1985.  
 李泰鎭, 「黨爭을 어떻게 볼 것인가」,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범조사, 1985.  
 李成茂, 「17세기의 禮論과 黨論」, 『조선시대 黨爭의 綜合的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鄭萬祚, 「朝鮮時代의 士林政治」, 『韓國史上的 政治形態』, 일조각, 1993.  
 李樹煥, 「大院君의 書院毀撤과 嶺南儒疏」, 『嶺南史學』6, 영남대 국사학회, 1994.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의 文廟從祀 運動과 그 性格」, 『朝鮮史研究』3, 조선사연구회, 1994.  
 薛錫圭, 「현종 7년 嶺南儒林의 議禮疏捧入 顛末」, 『史學研究』50, 한국사학회, 1995.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의 公論形成과 上疏經緯」, 『朝鮮史研究』4, 조선사연구회, 1995.  
 정진영, 「19세기 후반 嶺南儒林의 정치적 동향—萬人疏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4, 부경역사연구소, 1997.  
 薛錫圭, 「拙齋 柳元之의 理氣心性論 辨說과 政治의 立場」, 『朝鮮史研究』6, 조선사연구

회, 1997.

薛錫圭, 「活齋 李穡의 理氣心性論 辨說과 政治的 立場」, 『朝鮮時代史學報』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설석규, 「퇴계학파의 分化와 屏虎是非( I)」,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鄭萬祚, 「韓國 書院의 歷史」, 『韓國學論叢』 29, 국민대 국사학과, 2007.

## Abstract

The Consensus Forming among the Seonbis of the Yongnam Region  
in the Joseon Dynasty Era and the Maninso Led by Yoo Do-Soo

Sul, Suk-Kyu

This treatise examines, in relation to the tendency of the consensus forming among the seonbis of the Yongnam(嶺南) region, the meaning of Yongnammaninso(嶺南萬人疏) that, led by Yoo Dosoo(柳道洙), petitioned to bring back the Daewongun. It also examines the course of related events.

The politics of the Joseon era were defined as Sarim politics led by the Sarim faction that emphasized morality and justice. It can also be described as party politics that promoted mutual control and coexistence among various political factions as well as consensus politics that allowed participation of the out-of-office seonbis submitting Sangso(上疏: a petition to the king). As a result, consensus forming among the out-of-office Sarim seonbis were stimulated and that consensus became an important variable in political scenes.

Those who led the consensus forming among the out-of-office Sarim seonbis had their origin in the Yongnam region. They took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Sarim politics. After the Injobanjeong(仁祖反正) they secured their role as a counterbalancing force carrying on the Moonmyojongsa(文廟從祀) and Boksang(服喪) controversies against the Seo-in(西人) party. Their consensus forming was temporally regulated by the Ginsil(謹悉) measure in the king Yongjo(英祖) period but they broke through this barrier with Maninso. Maninso was also used to bypass the Sedo(勢道) regime's consensus blocking. Yoo Dosoo's Yongnammaninso can be interpreted with this historical context.

Taking Daewongun's rise to power as a momentum, Yoo Dosoo wanted to reactivate Sarim politics withered by the Sedo regime, for Daewongun's reforms were intended to consolidate a social order based

on Sung Confucianism and, on that basis, to eliminate various social ills. Therefore, Yoo Dosoo recommended the high state council Yoo Hoojo(柳厚祚) to insist on carrying out the Hyangyak(鄉約), wrote Sanggambakui(相鑑博議) and sent it to counsel the king. The reform that the Sarim faction of the Yongnam region wished for could be frustrated by Daewongun's retirement in Jikgok(直谷). The Yongnam Sarim seonbis, however, couldn't easily make a consensus for his return. The reason was that, though Daewongun tried to keep balance between the Byung(屏) sect and the Ho(虎) sect, he included Hogeseowon(虎溪書院) in the list but did not include Byungsanseowon(屏山書院) in his efforts to close down seowons, therefore provoking the Ho sect. The situation required an impartial leader capable of forming a consensus among the Yongnam Sarim and the recommendation of Yoo Dosoo as such a leader was significant. It meant Yoo Dosoo, though he belonged to the Byung sect, had retained close relations with the Ho sect and showed the prestige he enjoyed in his regional society.

Yoo Dosoo and other petitioners, however, were exiled and thus failed the Yongnammaninso that had asked for Daewongun's return. With this, the Sarim politics that Yoo Dosoo hoped to realize with Daewongun's backing, also dissipated.

#### Key Word

Sarim(士林) politics, Bungdang(朋黨) politics, Consensus(公論) politics, Maninso(萬人疏), Sodoo(疏頭), Ginsil(謹悉) measure, Byung-Ho(屏虎) dispute

▪ 논문투고일 : 2008.11.15. 심사시작일 : 2008.11.20. 심사완료일 : 2008.11.28.